

#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6년 7월 31일(월)

7th

■ 발행인 : 지재식 ■ 편집인 : 최광수 ■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 031-727-4815 ■ 홈페이지 :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 본사에 올리는 승리의 함성

### KT그룹노조 공동임단협 전진대회, “자본의 공세에 맞서 연대투쟁하자”

KT그룹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22일 KT본사 앞에서 1500대오가 모인 가운데 공동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었다.

사측은 처음부터 전진대회에 위축된 듯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입구를 컨테이너 박스로 막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측의 행태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으며 집회 중간중간에 “임금피크제 저지! 연봉제 저지! 2006년 임단협 승리”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공동임단협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지재식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KT그룹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국부를 유출하고 매국행위를 하고 있는 경영진”을 비판하면서 “오늘 우리의 행동이 애국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T그룹이 민영화 이후 7만 직원에서 4만으로 반 토막 나고 지금도 고통전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의 고통은 민영화를 막지 못한 대가”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연대투쟁을 통해 외국의 지배개입과 한미FTA 저지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격려사에 나선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KT그룹 노동조합이 이렇게 연대하여

선봉투쟁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한미 FTA 등 노동계가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자가 연대해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가 자본과 권력 앞에 무너져도 의기소침하지 말자”며 “KT그룹 노동조합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연대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룹전체 노동조합이 연대해 전진대회를 연다는 것은 무척 큰 의의를 가지며 사측을 압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즘 언론이 양대노총을 대결구도로 엮어 가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함께 연대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 투쟁에 적극 노력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단위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투쟁사를 통해 “자본의 총공세와 사측의 저질 노무관리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사업장의 차이, 환경과 처지의 차이를 떠나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할 것 ▲반노동자 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고 자본의 공세에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 ▲소속 모든 노동조합이 임단협 승리의 시점까지 공동 투쟁할



것 ▲통신노동자의 생존권과 통신허권 사수를 위해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 ▲KT그룹노동조합 공동임단협의 정신을 이어 받아 향후 연대의 길을 더욱 강화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맞는 KT그룹공동임단협 투쟁에는 KT노동조합을 비롯하여, KT프리텔노동조합, KT파워텔노동조합, KT네트웍스노동조합, KT하이텔노동조합 및 KT링크스노동조합 등이 결의를

다졌으며,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한 KTF 테크놀로지스노동조합이 참가했다.

## 노동조합, 수해복구지원... 실태조사 후 사측에 긴급조치사항 요구

노동조합은 폭우피해로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을 격려하고 함께 동참하기 위해 피해현장에 중앙상집을 파견하는 한편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재해대책상황실을 구성하고 복구물품을 지원하면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우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강원 지역에 생수와 장화 등을 공급하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피해현장은 도로유실로 인해 차량진입도 여의치 않았으며 조합원들은 각종복구장비를 맨몸으로 운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분기국사 전체가 유실되거나 물에 잠겨 신속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강원도 평창, 인제 지역은 피해가 심각해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피해복구를 위해 휴일도 반납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복구에

여념이 없었다. 조합원들은 “시간을 다투는 복구작업 때문에 식당을 찾아가갈 여유도 없다”면서 “간단한 간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현장요원이 아닌 지원팀의 물품이 부족하다”며 “우비, 장화 등의 보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긴급조치사항으로 ▲긴급예산 지원 ▲시설 복구인원 지원 ▲식사대응을 위한 간식 지

원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울산시 울주군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등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성명서>

## 사측의 전진대회 방해책동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할 것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사측의 인식수준이 전진대회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사측은 22일 열린 KT그룹노동조합 공동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의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립별 워크숍을 빙자해 조합원을 빼돌리는 등 각종 공작을 진행했다. 또한 조합간부들에게는 전진대회 불참을 요구하며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노동조합에 칼을 겨누면서 “상생, 신뢰”하자는 것은 공갈이며 협박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이에 호응하는 것은 굴욕이며 백기투항이다. 말로만 신뢰, 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온갖 공작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사측의 본질이다.

이제 분명해졌다.

사측이 노동조합을 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투쟁으로 돌파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부당노동행위를 단위노조별로 채증하고, 고발조치해 나갈 것이며, 교섭과정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 또한 KT그룹노조의 공동 대응을 통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공투본은 사측의 노무공작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분명한 교훈을 보여줄 것이다.

2006년 7월 26일

### 노사정대표자회의, 전일자문제 등 입장차 여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사전정보제공, 비밀유지의무,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등 3개 사항에 있어서만 의견 접근

26일 열린 6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회의의 논의시한을 내달 10일로 못박은 후, 대표자회의는 총장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어 논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사전정보제공, 비밀유지의무,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등 3개 사항에 있어서만 의견 접근을 이뤘을 뿐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업자 조합원 자격 등 17개 과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8월초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전일자 임금 지급, 복수노조 교섭장구,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등 노사간 이견이 가장 큰 6개 과제와 노사가 6차 대표자회의에서 추가로 제기한 6개 과제 등 모두 12개 과제는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26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7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들은 이같은 결과를 보고받고, “내달 10일까지 선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회의의 논의시한 연장 여부가 논란이었다. 양 노총은 8월 말까지 시한 연장을 주장했고, 노동부는 입법절차상 연장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대표자회의에서 그간 합의사항의 처리, 미 합의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 여부 등이 결정날 전망이다. 현재 노동부는 기 합의내용 먼저 입법 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6차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는데,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실무회의에는 노동계 2명, 사용자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2명, 노사정위 1명이 참가한다.

공무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논의틀을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경총 주관으로 내달 10일 오후 2시 열린다.

한미FTA 통신협상 공청회

“공공성 훼손·보편적서비스 붕괴 될 것”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은 7일 한미FTA통신협상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통신산업이 타 산업을 위한 희생카드가 돼서는 안된다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의 중지를 요구했다.

발제에 나선 김병근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외국인 자본제할 철패, 기술선택의 자유조항, 지배적사업자 의무조항 및 적용범위”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간산업인 통신산업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최고의 협상팀을 구성하고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FTA체결은 협상팀의 능력보다는 국가의 힘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동의없이 진행

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중추산업인 통신이 개방될 경우 미칠 폐해가 대단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한미FTA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 김신 정책개발팀장은 “공익심사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통신개방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배적 사업자의 국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가 통신망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의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철완 실장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것”이라며 한미FTA 통신협상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통신부만이 희생카드가 될 우려는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박준우 실장은 “국민 즉 소비자의 시각으로 볼 때 공공성의 측면에서 한미FTA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개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노동조합의 지재식위원장은 “KT민영화 이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한미FTA 통신개방의 폐해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KT지분 49%로 만으로도 외국인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영진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KT건물내 화장실 손수건 금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트 시간별 제한 운행 등 사소한 비용까지도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 비용이 투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인 위한 배당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 한미FTA 체결 후에는 더욱 표면화 하고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지분한도와 기술표준 자율성 등 미국의 통신관련 요구 사항을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의 중추적 신경 역할을 하는 통신분야가 외국자본에 유린될 것”이며 “통신의 공공성이 훼손돼 보편적서비스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빛속에서도 한미FTA저지의 열기 뜨거워

지재식위원장 “우리의 일자리 지키기 위해 한미FTA저지해야

폭풍우도 한미FTA저지의 뜨거운 열기를 막지는 못했다. 전국에서 모인 지부장들은 12일 정보통신부 앞에서 열린 ‘한미FTA 통신개방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기간통신망을 미국에 내주려는 정부의 계획을 규탄했다.

IT연맹 박용식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미국통신업자와 자본에게 유린당한 뉴질랜드 텔레콤의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겼다”면서 “깍뚱이만 남은 뉴질랜드 텔레콤이 한미FTA 통신협상의 이수를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요구가 묵살될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하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천명했다.

천영세 의원은 격려사에서 “뉴질랜드 텔레콤의 간부를 초청하여 진행한 공청회에서 느꼈듯이 통신



이 개방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이 미국자본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통신개방을 저지하자”고 밝혔다.

김지희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한미FTA에 국민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며 “한미FTA 협상을 저지시키자”고 주문했다.

지재식위원장은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해 조합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

러나 한미FTA가 체결되면 뉴질랜드가 90%의 인력을 구조조정했듯이 우리도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나서서 조합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IT연맹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빗속을 뚫고 서울역으로 이동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참가했다.

인터뷰 - 뉴질랜드 텔레콤 전 부위원장 존가드너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면 끝장이다”

뉴질랜드텔레콤 24,000 직원 중 21,000명이 해고 당해

민영화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먼저, 전화 연결의 비용에 대해서 말하겠다. 민영화 이전에 뉴질랜드는 도심이든 농촌이든 약 30달러(1뉴질랜드달러=680원) 수준의 표준요금이었다. 정부가 국가 기본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연결 비용을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민영화 이후 외곽 지역,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상당한 고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가장 심한 경우엔 전화선 하나를 새로 놓는데 1만 8천달러를 청구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이 안 좋았고,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500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전화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아직도 비용 때문에 전화를 못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는 도심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농촌지역의 고객은 70년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투자가 되지 않으니 현대화 되지 않는 것이다.

민영화 초기 뉴질랜드는 통신네트워크가 우수한 편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도 옛날 전화를 쓰고, 전화선을 통해 팩스를 수신한다거나 그런 서비스는 전혀 안 된다. 뉴질랜드는 가족들과 관련한 전기 요금이 많은데, ‘텍’ ‘텍’ 전화의 잡음이 너무 심해서 잘 들리지도 않는다.

통신사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 교환기를 임대해서 쓴다고 하는데.

업무 관련자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 장비 목록에 교환기들이 들어있지 않다. 다른 데다 팔아버리고 임대하는 형태로 쓰고 있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소유 여부를 떠나 최신 기술 바탕으로 하는 교환기로 대체해야 하는데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임대할 장비를 왜 파는가?

돈 문제 아니겠나, 결국은. 미국인들이 장기적인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실적을 좋게 해서 가능한 많은 배당을 뽑아내려는 것이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으니, 돈 되는 것은 다 팔아서 회사 수익으로 잡고, 장비같은 건 임대해서 쓰는 거다.

인터넷 보급은 되고 있나?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인터넷은 보급률이 상당히 낮고, 그 비용 때문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지금 정부는 사업체를 일반 사용자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아예 분할 하는 게 어떤가 생각 중이다. 모든 게 민영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민영화 때



미국의 관심은 오직 돈! 국가의 안녕, 공공성에는 관심없다

에 상황이 훨씬 악화된 것은 확실하다. 농촌 지역은 라디오조차 낙후되어 있다.

민영화에 있어서는 미국의 컨소시엄이 인수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었나?

민영화는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실수였다. 통신부문을 원래가 독점기업 일 수 밖에 없고 서비스 대상이 공공인 영역이다. 민영화는 심사숙고 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다.

미국 컨소시엄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미국인들은 뉴질랜드텔레콤에 대해 반노조적인 입장을 취했다. 원래는 직원의 99%가 CEWU(Communications and Energy Workers Union, 통신 에너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그 노조는 무너졌다. 이후 EPMU(Engineering Printing & manufacturing Union, 공업인쇄 & 제조 조합)에 가입했는데, 미국인들은 고용계약상 강제하던 조합비를 넘겨주지 않았다. 회사에

서 반노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회사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조합원들은 거의 남지 않았다. 미국인들이 매입해 버리기 전에는 노조에서 사측과 협상할 때 두루 합의하고 약속만 하면 그걸로 ‘약속’이 된 거였다. 그런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문서에 마진표 하나조차도 찍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했고, 그런데도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가 한미FTA와 무슨 관련이 있나?

당시 뉴질랜드가 어떤 상태가 됐냐하면, 관세를 많이 철폐하고 통신 등에 대한 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FTA 체결과 같은 상태였고, 그래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다. 뉴질랜드 정부의 명칭함인지 순진함인지 마구 해외 자본을 받아들여서 쉽게 시장을 장악당했다. 뉴질랜드는 이미 규제 완화가 너무 진행되어서 통신의 경우엔 FTA논의를 따로 할 것도 없다.

한미FTA에 대한 생각은?

FTA를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잘 대변하면서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주권과 관련된, 예를 들어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로 같은, 국민에 대한 기본서비스가 외국인 혹은 자본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이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자본을 다 유출시킨 상황을 봤다. 노조에 대한 안티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었다. 뉴질랜드 노동자들에게겐 참혹한 결과가 왔다.

뉴질랜드는 한때 통신 산업의 선도적인 국가였으나 현재는 제3세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되어야 할 돈이 다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유일하게 돈이다. 한국의 안녕이라든지 공공성 이런 것엔 관심이 없다.

국회의원도 반대하는 한미FTA 누구를 위한 통신협상인가?

오직 정부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미FTA 국민도, 노동자도, 사업자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까지 한미FTA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천명하셨습니까?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협정입니다. 또한 통신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서비스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포괄적인 의견수렴,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미FTA체결을 중지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부터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49% 외국인 지분제한 조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의 투기자본에 통신산업 잠식되면 ‘IT강국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한미FTA 제2차 협상이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17개 분과 중 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한 12개 분과에서는 양허안 또는 유보안을, 나머지 5개 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이 있어 우리 정부협상단은 국민의 바람과 의지를 무시한 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분야 협상의 경우, 농업, 금융, 보건 및 의료분야의 관심에 가려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통신협상이 서비스협상에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채, 다른 분야의 협상타결을 위한 ‘대안적 선택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현실로 다가올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2차 협상의 둘째 날인 7월 11일 한미FTA 협상의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지만 통신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통신은 이미 민영화 되었다. KT를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주장해 한미 양국이 통신시장의 개방에 합의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브리핑 내용을 오보였다고 밝힌 김종훈 수석대표는 7월 13일에는 “서비스 유보안에서 통신분야는 빠지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통신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되었지만 외국인 지분제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어정쩡한 답변을 보인바 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주장하듯이 한미FTA 통신협상에 있어 문제는 KT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핵심은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될 경우, 고배당을 요구하고 투자를 회피하는 외국의 거대자본에 국내 통신업체가 잠식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우려는 ‘뉴질랜드텔레콤’의 사례에서 우리가 쉽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뉴질랜드의 기간통신사인 뉴질랜드텔레콤의 민영화조치 및 외국인지분제한 폐지로 뉴질랜드텔레콤은 해외자본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들 투기적 자본은 단기 목적에 치중해 중장기적 전략사업 및 기술투자는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과도한 구조조정 및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 투기자본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높은 통신가격 정책을 추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낙도, 오지 및 농촌 지역 등에는 서비스 투자를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지역 및 계층간의 정보획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에 타결된 미국과 호주간의 FTA 통신관련 협상에서 양측은 호주의 공기업인 ‘Telstra통신’의 외국인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간통신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중략) 본 의원은 최근 한미FTA 통신협상 공청회에서도 통신분야 협상의 졸속추진 및 타분야의 협상타결을 위한 대안적 카드로서 전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신협상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김종훈 수석대표의 입장표명의 반복은 결국 통신협상이 사전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견수렴 등 준비된 협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략)

# 2006년 단체 교섭 6대 요구

## 단체교섭 6대 요구

임금인상	기본급 3%+세후 당기순이익 성과배분(20%)
연금저축 가입	매월 10만원 지원
복지기금	세전당기순이익 5%(650억) +단체보험(18억)+기념품비(76억)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	
해고자 전원 복직	
KT그룹 복지회관 건립	세후 당기순이익의 1%

**임금인상**  
기본급 3% + 세후 당기순이익 성과배분  
20%(1,996억) = 13.2% 인상효과

### ① 실질임금 보장

- 물가 3% 상승 예상
- 올해 호봉승급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보다 실질임금은 하락
- 최소한 지난해 수준이상의 임금유지로 인해 실질임금 유지 필요

주요연구원의 2006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05년 실적치	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 연구원	삼성경제 연구원	LG경제 연구원
경제성장률 (GDP 기준)	3.9	5.1	5.0	5.0	4.8	4.7
물가상승률	2.7	3.0	3.0	3.0	3.6	2.9

경제성장률 및 물가와 임금인상률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8.5	3.8	7.0	3.1	4.6	3.9	5.0
물가인상률	2.3	4.1	2.7	3.6	3.6	2.7	3.0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10.8	7.9	9.7	6.7	8.2	6.6	8.0
임금인상률(1)	3.0	6.6	4.9	7.0	3.5		
임금인상률(2)	8.0	5.1	11.2	9.2	6.0	7.5	
KT임금인상률	5.5	동결	3.5	2.0+주 식22주 (일회 성)	2.0+50 만원(일 회성)	3.0+( 성과급 100%+ 주식60 주:일회 성)	

\* 주 1. 2005, 2006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 및 전망치임. 2. 임금인상률(1)은 전체노동자 임금인상률이며 사용자보수총액을 임금노동자수로 나눈 '노동자당인당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했고, 임금인상률(2)은 5인 이상(1999년까지는 10인 이상, 2005년은 1-10월 누계 평균) 상용노동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했음.  
\* 자료 한국은행, 『2006년 경제전망』(2005.12);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② 성과배분

- 표준 생계비를 탈피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대안적 모델 제시.
- 민영화 이후 주주에게는 당기순이익의 평균 55%(영업이익의

34%)까지 배당을 지급했으나 직원들에 대한 성과반영 미흡.  
- 인력축소 등으로 인해 노동강도 심화.

- 조합원들의 각종 비용절감 노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증가.
- ▶ 순이익은 2003년 8,301억원=>2005년 9,983억원 (20.2%증가)
- ▶ 영업이익은 2003년 12,431억원=>2005년 16,599억원 (33.5%증가)
- 조합원들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흡.
- 이 배분원칙은 지속적으로 유지 매년 지급되어야 할 것.

연도별 KT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주주환원 정책

구분	2003	2004	2005	2006
세전 당기순이익	12,897억원	17,995억원	13,592억원	
세후 당기순이익	8,301억원	12,555억원	9,983억원	
영업이익	12,431억원	21,271억원	16,599억원	
배당	4,215억원	6,323억원	6,369억원	
세후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률	50.77%	50.36%	63.79%	
영업이익 대비 배당률	33.91%	29.73%	38.37%	
주식소각	1839만주 소각 (시가 1조 1981억원)	무	무	522만2000주 소각(시가 2135억원 -7월 3일)

### ③ 양대노총 임금인상요구

구분	임금요구액
민주노총	▲ 정규직 9.1%(8.0%~12.6%) ▲ 임금격차해소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17.4% 요구
한국노총	▲ 정규직 9.6% ▲ 비정규직 19.2%

KT 지급역력 <자료:KT주주총회 자료집>

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
05년(24기)	8조 7651억원	2조 9533억	4646억
04년(23기)	8조 3991억원	2조 9672억	8015억
03년(22기)	7조 7758억원	(-)2499억	4215억
02년(21기)	8조 1458억원	1조 9164억	1조8198억
01년(20기)	6조 5622억원	1조 2072억	1조 1105억

\*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전신전화채권보전적립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의무적립해야하는 법정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등은 기업자산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4,434억원), 기업확장적립금(4조원) 등 임의적립금과 이익준비금(7,804억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이 3조원에 가깝다. 2005년에는 이익 잉여금이 배당을 제외하고 2조5천억이 어필됐다. 이는 회사의 지급역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연금저축 가입 추진 매월 10만원 지급

- 1996년 노사합의로 시행된 개인연금 2006년 8월 만기.
- 1999년 5월 이후 입사자에 대한 혜택 없음.
- 중간정산된 퇴직금 KT주식매입등으로 인해 퇴직후 노후 보장책이 미비
- 고령화를 대비한 보장책 절실

## 복지기금출연 세전당기순이익5%(650억) +단체보험(18억)+기념품비(76억)

- 단체협약 제9조 ②항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한다"에 의거 복지기금 650억 출연.
-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서에 따라 일반사망의 경우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재원(18억)은 복지기금에 별도로 출연.
- 2005년 단체교섭 부속협정서에 의해 "예산에서 지원하는 기념품 4종(1인당 연간2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재원은 복지기금으로 별도 출연한다"는 합의 사항에 따라 기념품비(76억) 출연.

##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

- 주택자금 대부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한 제도 도입 절실.

## 해고자 전원 복직

- 현재 해고자 5명
-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킴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 육성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 KT그룹 복지회관 건립 기금 출연 100억(세후 당기순이익의 1%)

- KT그룹사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한 시너지 발휘로 회사발전에 기여.
- 그룹차원의 기금 출연을 통한 전체 그룹 직원의 성과공유.
- 일차적으로 그룹사 전체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그룹 전체 직원이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절실.

## KT그룹노조 2006년 임단협 요구

### KTH 노조

- 임금 11% 인상
- 인사제도 개선 등

### KTN 노조

- 임금인상 : 기본급의 8%(물가인상률 3%, 경제성장률 5% 반영)
- 흑자전환 특별성과급 : 기본급의 100%
- 인사/보수 제도 개선  
2급이상 보직자 직급 연한제 도입
- 단체 보험 재가입 (10만원/월, 10년만기)
- 출장비 인상  
- 시내 : 5,000원 → 8,000원  
- 상시 : 4,000원 → 6,000원  
- 영업 : 8,000원 → 15,000원
- 중식비 및 출퇴근 교통비 인상  
- 현행 : 25만원,  
변경 : 30만원/월정액
- 사내복지기금 중  
가계자금 대출금액 인상  
- 현재 : 1,000만원  
변경 : 2,000만원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임원 사업장 전진배치 및 비용절감을 위한 차량 지원제도 폐지
- 전임자 임금에 대한 사항
- 직제규정에 없는 팀장제도 폐지
- 남용되는 특판제도 폐지
- KT그룹 복지기금 출연 :  
⑤년 세후 순이익의 1%
- 단원취급에 따른 조치 등

### KT링크스노조

- 기본급 2% 인상 요구
- 학자금 지급
- 흑자전환시 상여금 100% 지급

### KTF노조

- 기본급 8% 인상
- 성과급 200%
- 식대, 교통비 균일 인상
- 사내복지기금 5% 출연
- KT그룹노동자 복지기금 순이익의 1% 요구
- 대학 학자금 50% 추가 인상

### KT퍼시텔노조

- 기본급 8% 인상
- 학자금 100% 지원
- KT그룹노동자 복지기금 순이익 1%

## 막아냅시다! 사측의 음모

- 임금피크제 저지!
- 임금삭감 저지!
- 차등 성과급 확대 저지!
- 고정수당 폐지 절대반대!

## 쟁취합시다! 우리의 6대 요구

- 임금인상 : 기본급 3%+세후 당기순이익 성과배분(20%)
- 연금저축 가입 : 매월 10만원 지원
- 복지기금 : 세전당기순이익 5% (650억) + 단체보험(18억)+기념품비(76억)
-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
- 해고자 전원 복직
- KT그룹 복지회관 건립 : 세후 당기순이익의 1%

# 포스코, 건설노조 죽이기 사실로 드러나

## 각종 노조파괴 공작 문건 다수 확보... 경찰까지 나서 사측에 정보제공

포스코의 '비열한 노조파괴, 노동자 죽이기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역 오피니언리더, 건설노조 파업 관련 대책회의 결과 '06.7.12 포항제철소(이하 '포스코 노조파괴 공작문건')>라는 포스코 내부문건이 폭로됐다. 포스코가 작성한 이 문건에 기록된 내용을 압축하면 '포스코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이 입체적으로 기획 공작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12일자 '포항제철소(현 포스코)'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노조파괴 공작문건 제목은 <지역 오피니언리더, 건설노조 파업관련 대책회의 결과>이다. 이 문건에는 ▲"이병석 국회의원(한나라당 포항지역구), 이대공 이사장 등 지역의 오피니언리더(의견 주도층)들이 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글이 첫머리에 장식되어 있다.

또한 폭로문건에는 '06년 7월 13일 지역협력팀이 작성했다는 <건설노조 불법파업 상황관련 기관/단체장 메일링 리스트>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메일링 리스트에는 포항시장 및 포항지청장, 국경원 포항출장소장, 포항남부경찰서장, 해병대00사단장,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장, 노동부 포항지청장, 포항세무서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포함한 19개 기관단체장과 KBS포항방송국장, 경북일보 사장, 경북매일 사장, 영남일보 동부 공동취재본부장, 대구신문 및 대구일보 동부지역본부장 등을

비롯한 11개 언론사 주요간부, 포항철강관리공단이사장,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포항향토청년회 회장, 포항JC회장, 외주파트너사 협의회회장 등이 포함된 13개 주요 단체장 등 '포스코가 언급한' 포항지역내 포스코 우호세력들을 총망라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역내 주요인사를 총망라한 노조파괴 공작 목적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증거가 7월 12일 섭외부 지역협력팀이 작성한 <건설노조 파업관련 박승호 포항시장 면담결과> 내용에서 포스코 사측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문건에 적시된 이날 <면담결과>에 나타난 <박승호(포항)시장 의견>란을 보면 "포스코는... 본때를 보이고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고(박승호 포함시장)이" 역할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 문건에서는 '방법'으로는 '공권력 투입 전(前) 유인물 배포 또는 현수막 이용'이라는 지침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포스코가 작성한 이 문건 "총평" 부분에서는 "금번 면담은... 건설노조의 탈/불법행위, 사태해결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이라며 노조파괴 공작을 포스코가 주도하고 있음을 역으로 실토하고 있다.

그밖에 '포스코의 노조파괴 공작문건'에는 지난 7월 7일자로 포스코직원



한0우가 작성한 <제철소장님 남부경찰서장을 향의 방문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의 '남부서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공권력 개입(강제진압)을 촉구' 하는 내용과 함께 "(포스코 사내 <주임협의회>를 동원하여) 오늘부터(7월7일부터) 각 기관(청와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포항시청, 경북도) 홈페이지에 건설노조와 소극적인 공권력에 대해 적극대처를 주문하는 내용의 글 게시"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포스코 사측이 사내 모임을 동원해 사이버 상에서 여론조작에 주력하고 실천하였다는 증거도 드러난 것이다. 결국 합법파업 중인 건설노조와 조합원 등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공권력 개입을 통한 무력진압, 언론을 이용

한 여론호도, 사이버 도배를 통한 인터넷 여론조작 등과 함께, 포스코 사측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대체투입 등을 포스코 사측이 주도하고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포스코는 <향후대응계획> 부분의 <공감대 형성 및 노조명분 약화 활동(7.12.수. 이전)>에서는 ▲전문건설협의회, 파업부당성에 대한 성명서 지역 조간신문 게재(7.10. 월) ▲사설, 기고문, 기자수첩 등을 통한 우호 여론 형성(7.10~7.11. 화) (경북일보에 사설과 기고문, 메일신문) ▲고소고발(7.7.금~) ▲지역 사회단체 성명서 발표(7.11. 화) 등을 기록하고 있어 포스코가 마련한 각본대로 일부 언론 등이 움직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회의, 공동투쟁 구성 확정

노동조합은 14일 11시에 KT네트워크스

에서 열린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KT그룹 공동 입단협

및 전진대회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각 단위사별 요구안과 투쟁현황을 공유한 뒤 공동투쟁본부 조직을 확정했

다. 공동투쟁본부는 참여 단위사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집행위원장은 류준용 조직처장, ▲조직, 쟁의담당은 김배정 국장(KT노조) 임승빈 국장(KTF노조) ▲재정담당에는 박재현 국장(KT

파워텔노조) ▲대외협력담당에 이진한 실장(KT링크노조), 박재범 국장(KTF노조)

공투본은 격주마다 대표자회의를 열고 각종 투쟁사안과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4일 KT, KTF, KT파워텔이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18일에는 KTH, KT네트웍스, KT링크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 "임금피크제, 인건비 절감 접근은 안돼"

노동부와 뉴캐러다임센터가 25일 오후 대한상공에서 개최한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토론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다수 기업이 현재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만 고용보장형으로 접근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임금피크제의 국내의 도입사례 및 효과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반면,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시니어사원 제도라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특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정년정장기간이 단지 1년에 불과하다"고

국내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산요전기, 미츠비시전기, 교와에시오, 히타치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공통점은 모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는 점이다. 모두 60세 정년에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사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니어사원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임금피크 도입 9개 기업 사례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1년차 직원에게 기존 임금의 80~90%, 2년차 50~70%, 3년차 40~60%, 4년차 30~50%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용연장이 되더라도 1년 정도에다가 인건비 삭감분은 50~70%에 이르는 것이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관련 : 노사합의(2004.8.6)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지급기준 :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지급율

구 분	연봉제 지급률	호봉제 지급률
근속 10년 미만	45%	65%
10년 이상~17년 미만	55%	75%
17년 이상~25년 미만	65%	85%
25년 이상	80%	100%

지급시기 : 2006. 7. 25(화), 12월 보수지급일(예정)      근속년수 산정기준일: 2006.12.31

지급금액 : 지급기준의 50%씩 각각 지급

지급계좌 : 급여계좌

# KITF노조 IT연맹 가입

KTFT노동조합(=위원장 안호경)은 7월 20일 조합 설립과 동시에 IT연맹을 상급단체로 결정했다.

KTFT노동조합은 340명의 직원 중 200명이 넘는 인원이 조합에 가입했다. 안호경 위원장은 "많은 조합원들의 지지 속에 건설된 노조인 만큼 본 때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날 IT연맹 강화수 수석부위원장은 안호경 위원장에게 연맹 가입 인증증을 전달하며, "신생 노조의 열정으로 노조의 성장과 더불어 연맹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환영의 인사를 했다. 이로



써 총 11개 노조가 연맹에 가입하게 됐다. 한편, KITF는 이동통신 단말기 EVER를 만드는 회사이다.

# 한국전화번호부노조 IT연맹 가입

한국전화번호부노동조합(위원장 김시희)이 연맹 12번째 가맹 노동조합이 되었다. 연맹 박흥식 위원장은 26일 가입원서를 제출한 한국전화번호부노동조합 김시희 위원장에게 가입인증증장을 교부하고, "12번째 단사가 생긴 만큼 더 규모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축하의 인사와 함께 연맹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였다.

가입인증증을 전달받은 김시희 위원장은 "연맹 가입이라는 어려운 결정에서 내뿜어 일기했으나, 마침내 전체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냈다"면서, "힘



든 결정인 만큼 결실도 일차로 클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연맹 가입과 동시에 힘 있는 노동조합을 새롭게 꾸려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정치인들은 수해골프 그러나 우리는 격려문자

국민들이 수해피해로 시름에 젖어 있을 때 정치인들은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집이 통째로 휩쓸려가버리고, 도로는 혼잡조차 없어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힘겨워하는 국민들과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조합원.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해주시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동료에게 따뜻한 문자메시지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